

「주간 북한경제 동향」은 한주간의 주요기사를 정리하여, 북한 경제의 실상을 이해하고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제작하고 있습니다.
www.dprkinvest.org

주간 북한경제 동향

Weekly DPRK Business Review

2009년 1월12일(월)
통권24호(제2권 제2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0 아남타워 907호

발행처 : 북한투자전략연구소

전 화 소 02-782-2677
팩 스 02-3452-2312
이 메 일 master@dprkinvest.org

북한투자전략연구소 시론 이 시론은 남북의 여러 사안에 대한 북한투자전략연구소의 생각과 의견을 담은 글입니다.

신년사로 본 2009년도 북한경제 전망과 남북경협 방향

사뭇 비장감마저 느껴진다. 2009년 북한 신년사를 본 뒤의 사회이다.

우선 ‘천리마 대고조’, ‘혁명적 대고조’ 등 ‘대고조’라는 표현을 무려 25회나 사용하며, 강조한 것은 2009년도 상황을 북한이 간단치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올해를 강성대국을 향한 비약의 해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경제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실을 감안하면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즉, ‘대고조’의 강조는, 역으로 올해의 열악한 상황을 주체적 노력으로 극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한다.

더욱이 올해 신년사에는 작년까지 명시했던 ‘경제 운영의 중심은 내각’이란 언급이 전혀 없다. 오히려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 발양’을 강조하여 당이 경제 운영을 책임져야 함을 시사했다. 물론 계획체제를 유지할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과거와 같은 당 중심 경제로의 환원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당 중심론의 재부각은 그만큼 북한이 올 한해의 전망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반증한다.

그렇다면 북한이 2009년의 경제 전망을 밝게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외부에서 공급될 자원의 양이 절대적으로 감소할 것을 예상한 듯하다. 올해 신년사에 ‘대외경제관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도 이것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2008년에는 외부에서 자원이 들어올 선행 함의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남측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여 남측이 공급한 자원은 북한의 경제 운용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의도적 무시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북한은 당국간의 협력은커녕 인도적 지원조차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 올해 북한이 유달리 ‘자립’과 ‘자력갱생’을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사정이 이렇다면 올해에는 북한이 식량과 비료 지원을 먼저 요청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체의 힘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신년사에서까지 유기질비료 생산을 강조한 것에서 북한의 결의 수준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올 신년사에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 있다. ‘금속공업의 선차적 발전을 중심 고리로 틀어 쥐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금속공업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뿐만 아니라 원석 채굴과 원료 및 생산품 운송 등을 위해 SOC시설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금속공업을 중심고리로 삼기에는 에너지난과 SOC시설의 취약에 시달리는 북한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

그러면 북한이 금속공업 선차적 발전론을 주장한 의미는 무엇일까?

우선 선군노선에 입각한 ‘사회주의계획경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금속공업은 선군경제의 주축인 국방산업 혹은 중공업의 기간이 되는 분야이다. 그런데 중공업은 IT와 함께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을 향해 ‘단번 도약’하는데 중심이 되는 산업이다. 그러므로 금속공업을 선차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선군경제가 북한경제의 핵심이라는 강조를 넘어 실제 경제구조를 그렇게 정비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금속공업은 에너지와 SOC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금속공업에서 계획을 확정하면, 계획 달성은 전력과 석탄 등의 에너지와 철도와 도로 등의 SOC와 같은 나머지 선행 부문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자연스럽게 이들 부문의 생산 독려와 함께 산업적 연관성을 매개로 이들 분야에 대한 계획의 통제도 강화할 수 있다. 북한이 신년사에서 ‘금속공업을 중심고리로 틀어쥐으로써 인민경제 중요부문의 생산잠재력을 최대한 동원’하겠음을 표명한 것도 이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러므로 금속공업의 선차적 발전론은 결국 사회주의계획경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북한의 의도가 과연 진정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계획경제를 운영하려면 국가가 경제 각 분야에 자원을 제대로 공급해주어야 하는데, 현재 북한은 그럴 능력이 없다. 따라서 자원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지 않는 한 계획경제로의 환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다음은 풍부한 지하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북한은 경제난으로 금속공업이 낙후하여 부가가치를 높이지 못한 채 원광석 상태로 수출해 왔다. 앞으로는 이러한 저효율성을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북한의 정책 방향이 경협사업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먼저 투자 협력에서 북한이 개별 광산에 대한 직접적인 개발 형식보다는 점차 금속공업 시설에 대한 현대화 방식을 지향할 것인 바, 광산을 개발해서 광석을 가져가는 기존의 방식보다 광산과 제련시설을 연계한 개발, 금속공업에 대한 직접 투자 방식의 사업 모델이 더 유의미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이런 차원에서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논의했던 단천 민족공동자원개발 특구를 되살릴 필요가 있다. 남, 아연, 마그네사이트 주산지인 검덕광산과 룡양광산 등이 있는 단천은 단천제련소, 단천내화물공장 등 금속공업 시설도 집중돼 있어 민족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이다. 물론 본격적인 논의와 추진은 남북관계가 정상화돼야 가능하겠지만 다국다자형 사업 모델 개발, 자원개발 전문 민간 펀드 설립을 위한 제도 정비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할 수 있는 영역도 많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것이다.

▶제24호 목 차

이주의 칼럼

막힌 남북관계 민간교류서 물꼬 트자 ----- 2

이주의 주요 기사

北이 경제분야 장관을 대거 교체한 이유는? ----- 3

北 화학공업성 “화학비료 생산정상화 주력” ----- 4

北 철도성 “철도 증량화·통신망 구축 주력” ----- 5

중국車, 쌍용차 이어 평양차도 점령? ----- 6

“평양 남북경협 업체 100곳 정상가동중” ----- 7

“北, 핵무기 폐기는 북미 국교수립 후” ----- 8

“남북경협 중단시 경제손실 7조” ----- 9

“작년 北 무기수출 반등...1억弗 상당” ----- 10

SKorean farmers urge resuming food aid to North ----- 11

金總書記、後繼不在の「3つの理由」 ----- 11

추천논문 / 북한 수출산업의 현황과 발전 과제 ----- 12

함께 보는 최근 북한단신 / ----- 12

이주의 북한 관련 행사

●(사)남북물류포럼 제29회 조찬간담회

▶주제:2009년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전망

▶일시 : 2009년 1월 13일(화) 07:15

▶장소 : 퍼시픽호텔 3층 장미홀

●중소기업진흥공단 남북경협 정책토론회

▶주제 : 중소기업 남북경협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 2009년 1월 15일(수) 15:30

▶장소 : 중소기업진흥공단 15층 강당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제41회 통일전략포럼

▶주제 : 2009년 한반도 정세 : 변화와 과제

▶일시 : 2009년 1월 16일(금) 14:30

▶장소 :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통일관 정산홀

●국제한민족재단 러시아 대사 초청토론회

▶주제 : 2009한러관계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전망

▶일시 : 2009년 1월 21일(수) 07:30~09:00

▶장소 : 소공동 롯데호텔 에메랄드룸(2층)

이 주의 칼럼

막힌 남북관계 민간교류서 물꼬 트자

고유환(동국대 북한학 교수)

남과 북이 연초부터 험한 말을 주고받은 것을 볼 때 올해 남북관계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을 시사한다. 북은 신년공동사설에서 남측 당국에 대해 “파소독재를 되살리며 남북대결에 미쳐 날뛰는 남조선 집권세력”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맞서 이명박 대통령은 새해 국정연설에서 “북한은 이제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구태를 벗고 협력의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한해 남과 북이 관계설정을 하지 못하고 갈등을 지속한 데는 무엇보다 6·15공동선언, 10·4선언과 관련한 계승문제를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 선언에 대해 북한이 전면이행을 선언하고 협의하자는 데 반해 남측은 이행을 위한 협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북한이 노무현 정부 막바지 정상회담에 나온 것은 남측의 새 정부를 의식한 것이었다. 10·4선언의 대부분은 남측 새 정부와 이행을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시 북한이 정상회담에 나온 것은 부시 대통령이 언급한 ‘중전선언’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6·15선언의 사문화를 막기 위해서였다. 10·4선언은 6·15선언을 살리기 위한 ‘징검다리’였다. 북측은 10·4선언을 통해서 남북관계에 이른바 ‘대못질’을 해두고 새 정부와 관계설정을 용이하게 해보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남측 새 정부는 임기 말 정상회담을 ‘불순한 의도’로 보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 말 북측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남쪽에 와 정세를 살피고 남북관계 연속성을 추구했지만 남측 새 정부가 차별화를 시도함으로써 결국 북측의 정상회담 추진은 오프으로 확인됐다. 북한 내부논리로 보면 ‘무오류성’이 보장된 북측 지도자의 오프안은 있을 수 없다. 때문에 6·15와 10·4선언에 대한 남측 정부의 이행의지 표명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도자의 권위를 절대시하는 북측이 지도자가 서명한 두 선언의 이행을 강조한 것은 유일체제의 속성을 반영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다른 문제도 풀리지 않게 돼 있다. 대화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대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올해 남북관계 진전 여부는 6·15와 10·4선언에 대한 남측 정부의 이행의지 표명 여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며 기다리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이 표명과 달리 북한 ‘급변사태론’에 근거한 게 아니냐고 의심한다. 남측 정부의 공식 주장과는 달리 일각에서 북한 급변사태를 가정한 시나리오들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어 북측은 남측의 주장을 믿지 않으려 한다. 신뢰가 무너지고 감정이 많이 상해 당장 남북대화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경험에 의하면 북한은 본질적 변화 요구를 수용하기보다는 다른 대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새해 북한과 중국은 외교관계 60돌을 맞아 ‘조중친선의 해’로 선포하고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에서 ‘조선반도비핵화 실현’과 함께 북미 적대관계 해소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올해 북한의 최대 화두는 경제다. 경제 재건을 위해선 대외관계 확장이 불가피하다. 북한이 남한당국 배제정책을 지속하면 북미관계 진전도 어려울 수 있기에 남북관계를 일정 정도 유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남측에선 우선 민간교류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늦어도 다가올 봄까지 금강산과 개성관광부터 재개해 신뢰를 쌓고 당국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의 원문은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109031005>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북한, 올 하반기 권력 엘리트 변동 예상

-- 1월 5일 노컷뉴스

북한이 올해 7~9월쯤 실시할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와 국가지도기관 선거로 권력 엘리트들의 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03년 8월3일 임기 5년인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 6백87 명을 선출해 지난해 7~8월 중 차기 대의원을 선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등 북한 내부 사정으로 아직 선거를 치르지 않았다.

노동당의 지도를 헌법보다 중시하는 북한에서 대의원 선거가 헌법상의 규정대로 시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대내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으나 과거의 전례를 고려할 때 북한은 7월~8월 사이에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선거를 하고, 9월쯤에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를 열어 국가지도기관 선거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북한의 국가지도기관 선거가 실시되면 그동안 확인하기 어려웠던 권력 엘리트 변동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면서 “장성택 전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의 ‘분과행위’에 연루돼 2004년 7월 인민보안상직에서 해임된 최룡수의 국방위원직 보유 문제도 관심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또 “2007년 4월쯤 인민군 총참모장에 임명된 김격식 대장의 국방위원직 진출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수년 내에 후계자 지명이 이루어질 것을 대비해 국가기구 내에서 김영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의 퇴진 등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예상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도 최근 ‘2008년도 정세 평가와 2009년도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은 올해 7~8월 중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해 중폭의 세대교체를 단행하는 등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개성진출 기업 72% “현 상황 지속될 것”

-- 1월 5일 머니투데이

개성공단 진출기업 10곳 중 7곳은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기업 2곳 중 1곳은 지금의 상황이 남북 공동책임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기우)이 북한의 ‘12·1조치’ 이후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경영실태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25개사 가운데 18개사(72.0%)가 현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답했다.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는 기업은 4개사(16.0%)였으며, 곧 정상화 될 것으로 판단하는 기업은 3개사(10.0%)인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12·1조치’의 영향으로 현지에 남측 인력이 상주하는 17개사 중 70.6%인 12개사가 상주인력을 줄였다고 답했다. 이중 7개사는 50~80%의 상주인력이 감소했다. 가동기업 13개사 가운데 9개사는 아직 별 영향이 없다고 응답했으나 나머지 4개사는 생산위축 등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의 주요 애로사항은 △상주인력 축소로 생산 차질, 품질관리 애로, 신규라인 증설 보류 △출입시간 축소 등의 통행 제한으로 긴급 사항에 대응 곤란 등이다. 다음으로 △주문 축소 및 거래선 이전 움직임 △바이어의 비상시 대비 대체방안 요구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지금처럼 악화 상황을 초래한 요인으로 개성공단 진출기업 가운데 52.0%는 남북 공동책임이라고 응답했다. 남한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는 답변은 36.0%로 북한 책임 12.0%보다 더 많았다.

이들은 정부 및 지원기관에 △유연한 자세로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정책 추진 △국내 산업단지에 준하는 지원 △손실보조제도의 가입금액 및 보조비율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업체별 상황에 맞춘 손실보조제도 적용 등을 요청했다.

중진공은 개성공단 등을 비롯한 북한진출기업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지원과 기술지도, 판로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中 하남 이마, 북한에 석탄 프로젝트 진행

-- 1월 5일 EBN산업뉴스

중국의 석탄 생산업체인 하남 이마(Henan Yima, 義馬)사가 북한의 안주 지역에서 연간 1천만 규모의 석탄 채광 및 연간 120만 규모의 화학공업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5일 외신에 따르면 하남 이마사는 최근 “북한의 안주(安州) 석탄공사(Anju Coal Mining Corp)와 향후 2~3년간의 대규모 석탄 채광 및 화학공업 프로젝트를 위한 개발 의향서를 체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외신은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이마사 측이 북한의 안주 지역에서 종합 석탄원료 화력발전소를 비롯해 석탄 선탄장 건설 및 맥석 이용 프로젝트도 진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 2007년 약 1천800만톤의 원탄(crude coal)을 생산한 하남 이마사는 지난해 초 중국 산서성 지역에 탄광 3개를 추가하면서, 2009년까지 석탄 채광량을 연간 2천100만 이상으로 증대시킬 전망이다.

北이 경제분야 장관을 대거 교체한 이유는?

-- 1월 6일 헤럴드경제

북한이 최근 개각(改閣)을 통해 9명 안팎의 장관급 인

사를 교체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북한의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신임 부부장에 유영선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이 임명되는 등 인민군과 노동당의 핵심 보직에도 일부 변화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재까지 북한 매체 등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장관급인 금속공업상에 김태봉, 전력공업상에 허택, 철도상에 전길수, 임업상에 김광영, 무역상에 이용남을 각각 새로 기용했다. 이들 5개 부처 외에 상업성·재경성·수산성·민족경제협력위원회 등 4개 부처 장관도 바뀐 것으로 알려졌지만 후임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번 개각을 통해 북한은 이른바 ‘인민경제 4대 선행부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속, 전력, 석탄, 철도 분야 가운데 석탄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바뀐 셈이다. 석탄공업상은 앞서 지난 2007년 9월 김형식으로 교체됐다.

경제분야 장관들이 대거 교체된 것은 북한이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서 ‘경제 회생’을 강조한 것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설은 “금속공업은 사회주의 자립경제의 기둥”이라며 “전력·석탄·철도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켜 인민경제 발전을 추동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경제부서장의 물갈이를 통해 경제 살리기 분위기를 띄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구도를 본격화하려면 경제 회생과 체제 장악이 필수적이며 최근 개각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북한은 또 지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주역인 통일전선부 최승철 부부장을 지난해 남한 정세 판단 실책 등의 책임을 지고 해임했으며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유영선 전 위원장이 빈 자리를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北 화학공업성 “화학비료 생산정상화 주력”

-- 1월 6일 연합뉴스

북한의 한승준 화학공업성 부상은 지난해 “각종의 화학비료와 농약, 시약문제의 해결에서도 전진이 있었다”며 북한이 강성대국 달성 목표 해로 정한 2012년까지 화학비료의 생산을 정상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6일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와 흥남비료연합기업소에서는 국내원료에 의한 무연탄 가스화공정이 마감(마무리)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이것이 완성되면 지난 시기 수입에 의존해 오던 일부 화학비료들을 국내 자체의 힘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화학공장들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기술개선이 완료되고 새로운 생산공정들이 확립되면 화학비료와 가스소다는 자체의 힘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전망적으로는 수출도 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장담했다.

이어 그는 “현재 2.8비탈론연합기업소에서 염화비닐, 가스소다 생산을 위한 새로운 유기합성 생산공정확립을 위한 사업이 진척되고 있다”며 “이 공정이 실현되면 초산, 알코올, 옥타놀을 비롯한 화학제품들이 쏟아져나오고, 이외에 농약과 물감생산 공정이 완성되면 농업생산과 천생산의 전망이 열린다”고 소개했다.

그는 올해 계획에 대해 “2.8비탈론연합기업소를 모체로 하여 국내 화학공장의 대대적인 개건, 정비, 보수가 계속 진행된다”며 “특히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모든 생산공정들을 자동화, 컴퓨터화하는 사업에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美 ‘정치적 이유’로 대북 지원량 결정”

-- 1월 6일 헤럴드경제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현지시간 5일 미국이 북한에 제공한 인도적 지원량이 정치적 시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왔다고 미 의회 산하의 의회조사국이 지난 24일 발간한 ‘대북 지원’(Assistance to North Korea)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 의회조사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식량, 중유 등으로 제공한 총 지원량은 미화로 총 2억 100만 달러에 상당하며, 이 금액은 1999년에 제공된 2억 8700만 달러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지원량이 가장 많은 1999년과 2008년 사이의 기간 중 2006년에는 지원이 아예 없었고, 2005년에는 500만 달러, 2003년과 2004년 각각 약 2000만 달러, 3000만 달러의 지원이 있었다.

이 같은 규모는 지원량이 가장 많았던 두 해 수준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나머지 2000년에서 2004년까지도 미국이 북한에 준 총 지원량은 100만 달러를 약간 웃도는 정도에 그쳤다.

한편, 미국이 북한에 지원한 식량의 양은 1999년 70만 톤에 육박하는 대규모였다가 2000년 26만여 톤, 2002년 20만여 톤, 2003년에는 4만여 톤으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미국의 대북식량 지원은 2005년부터 3년간 중단돼 오다 지난해 5월 재개됐으며 2009년까지 다시 50만 톤의 식량이 제공될 예정이다.

경기도 민간단체 대북사업 첫 지원...을 사업계획 확정

-- 1월 6일 뉴시스

경기도는 북한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의 대북사업에도 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가 대북 민간단체를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최근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을 포함한 43억여원 규모의 올 대북사업계획(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총 4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남북 교류협력기금을 통해 민간단체의 대북사업에 지원된다.

단체별 지원규모는 최대 5000만원까지로 도는 신청을 받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지원 사업을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北 철도성 “철도 증량화·통신망 구축 주력”

-- 1월 7일 연합뉴스

북한 진길수 철도상은 2012년까지 철도 증량화를 통해 수송능력을 높이고 철도 통신망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철도상은 7일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철길의 강도를 높여 철도의 증량화를 실현하는 사업에 계속 주력한다”며 “2012년까지를 주요 철도망의 철도 증량화를 완결하는 해로 정하고 끈기 있게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철도수송의 과학화, 정보화의 실현도 또 다른 중심과업의 하나”라며 “철도운수 부문의 수송조직과 지휘를 전국적 범위에서 종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철도 정보통신망의 구축과 종합사령실의 완비를 위한 사업들이 현재 추진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철길구간을 조사하고 통보하는 체계가 세워져 이에 따라 철길의 보수보강사업이 선행되고 있다”며 “철도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위한 통신선로 공사, 현대적인 통신기술 도입 등의 사업들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철도 증량화 추진과 관련, 한국교통연구원 안병민 동북아북한연구센터장은 “우리는 레일 1m의 무게가 60kg이지만, 북한은 43kg에 불과하고 그마저 대부분 중국과 러시아에서 수입한 중고품을 사용해 노후화가 심하다”며 “레일 보수를 통해 더 많은 물량을 실어 나르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대북전략 TF 구성키로

-- 1월 7일 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남북관계와 관련한 중·장기 전략 수립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내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통일부는 통일정책국을 중심으로 ‘전략 TF(가칭)’를 구성, 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중·장기 남북관계 전략을 집중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달 31일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장기적 관점에서 대북문제를 풀어갈 것”이라며 중·장기 대북 전략 수립에 더많은 노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대통령은 남북대화 재개와 대화 재개시 추진할 각종 사업에 강조점을 둔 통일부의 업무보고에 대해 ‘장기적인 대북 전략과 관련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지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 정부 소식통은 “그간 통일부에서 해왔던 중·장기 대북전략 수립을 보다 내실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대북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 추진할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는 기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유사용 北동평양발전, 작년 1.3배 증산”<조선신보>

-- 1월 8일 연합뉴스

북한의 평양시와 평안남도 일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북한 동평양화력발전소가 지난해 전력생산을 전년에 비해 1.3배로 늘렸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8일 보도했다.

조선신보는 이 발전소의 전력 증산 이유에 대해 “1980년대에 도입한 동평양발전소의 설비는 한때 (석탄)연소율이 91%로 떨어졌는데 발전소가 자체의 힘으로 기술개선(개선)을 다그쳐 작년말까지 95%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는 점을 꼽았다.

이 신문은 선진국 화력발전소 보일러 설비의 석탄 연소율은 98% 수준이라고 대비시킴으로써 북한 화력발전소 설비 효율의 국제비교 기회를 제공하고 이 발전소가 4월의 태양절(고 김일성 주석 생일)까지 새로운 연소기술을 도입해 연소율을 “세계적 수준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다른 화력발전소에서선 중유를 불을 붙이는 착화 연료로만 사용하고 발전의 기본 연료로는 석탄을 이용하는 데 반해, 동평양발전소는 중유를 주 연료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북핵 6자회담 ‘2.13합의’에 따른 6자회담 참여국들의 대북 중유 제공도 전력 증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무역 총회사까지 국제전화 엄격 제한

-- 1월 8일 노컷뉴스

북한이 최근 휴대전화를 개통했지만, 전화를 통해 외부와 하는 소통은 여전히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에 있는 북한 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사업가인 노 모씨는 자유아시아방송에서 “북한의 사업 거래처와 국제 전화 통화나 팩시밀리를 이용

해 문서를 보내는 것이 예전보다 더 번거로워 졌다”고 말했다.

노 씨는 “예전에는 ‘대성무역총회사’나 ‘강성무역총회사’ 같은 큰 회사들은 독자적으로 국제 전화와 팩스를 갖추고 있었지만, 지난해 상반기부터는 평양에 있는 ‘통신센터’를 거쳐야 통신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 씨는 “‘평양 통신센터’는 외국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일단 전화를 건 사람의 신분과 용무를 확인한 다음 거래처 회사로 연결해 주고 거래처 회사는 전화 수신을 허가 받은 별도의 담당자가 전화를 건 용무와 내용을 받아서 관련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팩시밀리로 서류를 보낼 때도 ‘평양 통신센터’가 이를 사본으로 보관한 다음 해당 기업소에 가져가도록 통보하고 있다”면서 “평양에 있는 북한 총회사들의 대표 전화번호와 팩시밀리 번호가 어느 회사나 모두 같은 것은 ‘평양 통신센터’ 번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외자를 유치하려고 영업을 허용한 평화자동차 등 일부 합영회사에는 직통으로 국제 전화가 가능하게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北 ‘강성대국’ 구호 10년 ‘자력갱생’ 낙차

-- 1월 8일 연합뉴스

북한이 2012년 달성을 목표로 대대적인 대중동원 ‘감빠니아(캠페인)’를 벌이고 있는 ‘강성대국’이라는 말은 1998년 8월 외부에 처음 등장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8년 8월31일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을 발사했을 때 “이제 경제만 추켜세우면 강성대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김일성 주석 사망(1994.7) 후 3년간의 ‘유혼통치’ 끝에 김정일 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에 추대(1997.10)되고 이듬해 9월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한 헌법 개정을 통해 명실상부한 김정일 체제가 출범한 것과 때를 같이 한다.

수백만명의 대량 아사자를 낸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 끝나는 시점에 김일성 주석에게 기댄 ‘유혼통치’를 마치고 자신의 체제를 출범시키면서 새 체제를 상징하는 ‘비전’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내세운 것이다.

이어 북한은 1999년 1월1일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제목의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공식화했다. 이와 함께 2000년 ‘당창건 55돌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라는 제목의 공동사설은 1996년 공동사설을 통해 선포했던 ‘고난의 행군’의 종료를 선언했다.

북한은 그러나 2007년 상반기까지는 강성대국의 달성 목표 시점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다 그해 8월31일 노동신문의 정론 ‘승리를 믿으라, 내일을 믿으라’가 “강성대국의 해돋이”이라는 말을 쓴 데 이어 같은 해 11월13일 역시 노동신문이 사설에서 “가까운 몇해안에”라고 점점 구체화해 같은 달 30일 전국지식인대회에서 2012년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전국지식인대회는 2008년을 눈앞에 둔 시점이며, 2008년은 최근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2012년까지 5개년간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시발점이었다.

북한은 이에 앞서 2006년 신년 공동사설에선 “나라의 경제 전반이 확고한 상승의 궤도에 들어서게 됐다”고 주장함으로써 2007년 준비기간을 거쳐 2008년부터 본격적인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할 것임을 예고한 셈이었다.

獨 신문 “김정일 복귀로 北강경파 입지 잃은 듯”

-- 1월 9일 헤럴드경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복귀하면서 북한 내 강경파가 입지를 잃은 것 같다고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 차이퉁이 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 선양(瀋陽)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의 말을 인용, “김 위원장 와병중에 그의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등 강경파가 득세했지만 최근 수일 사이 장 부장이 당 내부에서 심각한 비판을 받았다”면서 “북한이 최근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것은 김 위원장의 복귀와 강경파에 의한 과도통치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장성택이 몇년 전부터 생겨난 자유시장을 한 달에 3일만 열도록 하고 50세 미만 여성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제한조치를 취하는 한편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적대정책을 강화했다”면서 “그러나 이같은 ‘북한식 네오콘’의 부상은 김 위원장의 재등장에 따른 개각 등 최근의 사태전개로 과거의 일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김 위원장이 인권을 유린하는 등 억압통치를 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북한 정권 내에서 그나마 가장 나은 인물”이라면서 “그는 선진기구를 동원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6자 회담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하지만 한번도 좌초되게 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車, 쌍용차 이어 평양차도 점령?

-- 1월 9일 노컷뉴스

중국의 자동차 회사가 평양에 합영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중국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의 한 자동차 회사가 평양자동차 합영회사를 설립해 버스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9일 전했다.

이 소식통은 “대부분의 평양 시내 버스들이 너무 오래 돼 교체할 시기가 훨씬 넘었기 때문에 도시교통의 활성화를 위해 버스 생산이 시급하다”면서 “최근 평양에서 불고 있는 도시의 현대화에 따른 대규모 개발 수요로 중국 기업들의 진출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해 테러지원국 해제에 따른 북한의 투자 환경이 개선된 점도 중국 기업들의 대북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중국 내 자동차 회사들도 남북 합영회사인 평화자동차를 통해 부품만 판매하는 형태로 북한에서 영업을 해왔다. 평양에서는 현재 무궤도 전기버스와 전차가 주요 대중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남아 가동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 남북경협 업체 100곳 정상 가동중”

-- 1월 12일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해 12월 군사분계선 통행을 엄격히 제한한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이 사업에 불편을 겪고 있으나 평양 시내의 남북경협 업체 약 100곳은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에 남북 합영회사인 평양대마방직을 세운 안동대마방직의 김용현 이사는 9일 “평양에는 의류 임가공 중심으로 약 100개 남북 경협업체가 사업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 11,12월엔 상황이 좀 심각했지만 지금은 괜찮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더 악화돼 북한이 전면 차단하는 일만 없다면 공장 운영에 문제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월말 준공식을 가진 평양대마방직공장은 원자재를 확보하는 대로 오는 3월부터 정상가동할 계획이라고 김용현 이사는 밝혔다.

김 이사는 “평양대마방직 공장의 제품가운데 남한에 들여올 수건, 양말같은 것은 중국 제품보다 단가를 싸게 국내에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베는 외국에 수출할 예정이다.

안동대마방직측은 그러나 평양대마방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수준을 놓고 아직 북한측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계속 협의하고 있다. 북한측은 외국인 투자 규정을 들어 월 120달러를 요구하고 있으나, 안동대마방직측은 기술자들에게는 개성공단 임금(월 70달러 수준)보다 다소 많게 지급하고 단순 근로자들에겐 더 적게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해 이달말 평양대마방직 이사회에서 최종 논의할 예정이다.

안동대마방직은 특히 북한의 물류 여건이 열악해 남북 경협 업체들이 원자재와 제품 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3월부터 신의주-평양, 남포-평양간 물류에 트럭 40대를 투입할 계획이다.

‘특 하면 정전’ 北 겨울철 전력난 여전

-- 1월9일 노컷뉴스

북한의 전력 사정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겨울철에는 여전히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평양시와 평안남도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동평양화력발전소가 지난해 전력생산을 전년에 비해 1.3배로 늘렸다고 8일 전했다.

조선신보는 동평양화력발전소의 전력 증산은 발전소 자체의 힘으로, 기술을 개선해 91%인 연소율을 95% 수준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겨울철에 들면서 평양 시내에는 전력난이 계속돼 변두리지역에는 야간에도 잦은 정전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낮에도 건설현장에 3~4시간 정전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소식통이 전했다.

평양시와 평안남도 일대의 전력은 평양화력발전소와 동평양발전소에서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북한의 연간 전력사용량이 2005년 2백16억 킬로와트(kWh), 2006년 2백25억 킬로와트, 2007년 2백37억 킬로와트로 늘었으며, 발전용량은 2005년 7백77만 킬로와트에서 2006년 7백1만 킬로와트로 줄었고 2007년엔 7백5만 킬로와트로 추정했다.

서먼 “美 차기정부, 북한核 전량 폐기 목표”

-- 1월 9일 뉴시스

미국의 차기 정부 북한특사로 유력한 웬디 서먼 전 대북정책 조정관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모두를 폐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교도 통신이 9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서먼 전 조정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 핵문제와 관련, 핵시설의 불능화 뿐만 아니라 핵무기의 개발 능력을 없애고 생산된 핵무기를 전량 폐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대북정책 조정관을 역임한 서먼은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함께 오바마 정부에서 설치될 것으로 보이는 북한담당 특사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서먼 전 조정관은 현재 오바마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에서 국무부 조직 개편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北, 핵무기 폐기는 북미 국교수립 후”

-- 1월 10일 연합뉴스

북한은 6자회담의 중착점인 핵무기 폐기와 관련, 미국과 국교를 수립해 핵공격을 받을 위협이 사라진 뒤에야 핵무기를 모두 폐기하게 될 것이라고 북한의 한 고위관리자가 작년 11월 미 싱크탱크 주최 토론회에서 밝혔다. 교도(共同)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핵무기의 폐기는 6자회담 비핵화 프로세스의 마지막인 3단계 과제로, 이 관리는 북한의 핵계획 신고를 검증하는 문서가 완성돼 협의가 최종단계에 들어가더라도 북미간 국교수립 전에는 스스로 먼저 핵무기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미국측에 못을 박았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지난해 11월 7일 뉴욕에서 전미외교정책회의(NCAFP) 주최로 개최된 토론회에는 북한에서 6자회담 차석대표인 리근 외무성 미국장 등 6명, 미국측에서 성 킴 6자회담 특사,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5명의 전직 대사, 그리고 버락 오바마 차기대통령의 외교정책에 관여하는 상원의 교위원회 스태프들이 참석했다.

북미 소식통에 따르면, 이 고위관리는 북한측 참석자를 대표해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고 미국의 핵 위협을 느끼지않게 된다면 단 한개의 핵무기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단언하며 국교정상화를 통해 안전을 보장받겠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북한측 참석자들은 대화를 기본으로 하는 현재 미국의 북한정책이 오바마 정권 아래서도 계속되기를 거듭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제2단계를 계속 늦추게 되면 “(6자회담에 대한) 미국내의 지지가 사라지게 된다”는 점을 경고했다고 통신은 밝혔다.

北매체, ‘참매’를 국조로 소개

-- 1월 11일 연합뉴스

북한의 주간지인 통일신보가 최근호(1.10)에서 “나라마다 자기 나라를 상징하는 국조가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참매를 국조로 하고 있다”고 ‘참매’를 국조로 소개했다.

그러나 북한 사회과학출판사가 출간한 2006년판 조선말대사전에는 국화(國花)를 풀이하면서 “우리나라의 꽃은 목란”이라고 소개했지만 ‘국조’라는 단어에선 ‘나라의 시조’라는 풀이 외에 ‘나라의 새’라는 풀이조차 나와있지 않아 북한이 국조를 공식 지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11일 북한의 온라인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통일신보는 “참매는 몸통은 그리 크지 않지만 균형적인 외모와 매우 빠른 속도, 영리하고 결괏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 인민은 오래전부터 자기들의 생활과 밀접히 연관돼 있고 조선 민족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참

매를 널리 사랑해 왔다”고 소개했다. ‘결괏있다’는 우물쭈물하지 않고 결단성있게 행동하는 폐기나 결기를 이르는 말이다.

신문은 참매가 고구려 건국 설화를 비롯,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생활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며 “고구려 사람들이 매로 꿩을 사냥하는 장면은 안악 제1호 무덤을 비롯한 고구려 무덤 벽화들에도 그려져 있고 고려시기에 와서는 국가적으로 매를 기르는 관청까지 두었다”고 말했다. 신문은 이어 “참매는 일명 보라매, 푸른매 또는 꿩매라고도 하는데 주변 나라들에는 ‘조선의 푸른매’라는 뜻의 해동청으로 알려져있다”고 덧붙였다.

세계식량계획 대북지원사업 ‘위기’

- 1월 11일 연합뉴스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지원 사업이 위기에 처했다. 사업에 필요한 지원 물량 확보가 지지부진한데다 WFP가 대행하는 미국의 대북 지원사업이 감시 요원 배치와 관련, ‘암초’를 만났기 때문이다. 11일 WFP 웹사이트(www.wfp.org)에 따르면 WFP는 올해 11월말까지 진행할 대북 긴급 식량 구호 프로그램을 위해 5억3000만달러를 모금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7일까지 목표액의 3.8%인 1천926만여 달러를 모으는데 그쳤다.

이는 주요 대북 지원국이던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현재 2008~2009년분 대북지원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있는 국가는 스위스·호주·캐나다 등 10국에 그치고 있다.

이에 더해 미국의 대북지원을 대행하는 사업도 한국어 구사하는 감시요원의 배치 문제를 놓고 북·미간 입장차가 불거지면서 중단 위기에 놓였다.

당초 WFP는 작년 5월 미국이 1년간 북한에 주기로 한 식량 50만t 중 40만t의 공급 및 분배감시를 대행기로 했다. 그러나 북한이 WFP의 분배 감시 활동에 한국어 구사 요원을 참여시키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는데 비협조적 태도를 보임에 따라 WFP를 통한 지원이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12월 북핵 검증 관련 협상이 결렬된 이후 한국어 구사 요원 문제를 비중있게 거론하며 한결 ‘간간한’ 분배 검증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에 미온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제공된 미국의 5,6차 대북 식량 지원분은 당초 WFP를 통해 제공기로 돼 있었지만 미국 NGO를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경로가 변경됐다. 미국 NGO측 북한 상주 직원 중에는 WFP 북한 사무소에 비해 많은 5~6명의 한국어 구사 요원이 있다는 점이 감안된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WFP로서는 대북 사업용 식량 확보가 여의치 않음에 따라 북한내 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게 됐다.

작년 미국의 대북지원 재개를 즈음해 WFP는 북한 사무소에 50명 안팎의 직원을 배치했지만 지원 물량이 줄어들면서 이 규모의 직원을 유지하는데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후문이다.

김정일, 건강상태 양호 미-일과 직접 대화 원해

-- 1월 12일 뉴시스

최근 중병설이 나돌고 있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건강상태가 좋으며 미국, 일본과 직접대화를 원하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 소문이 유포되기 시작한 작년 9월 방북해 그를 직접 만난 이탈리아 실업가점 경제학자 잔갈로 에리아 바로리(68)는 로마에서 마이니치와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바로리는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가 좋으며 중병설을 전면 일축하는 한편 김 위원장의 ‘메시지’로 북한이 미국, 일본과의 직접대화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그는 작년 평양에서 열린 북한 정권 수립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김 위원장을 면회했다.

바로리는 김 위원장에 관해 “이전보다 젊어졌으며 강력히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김 위원장이 가짜라는 설에 대해선 “전혀 사실무근이다, 그는 실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쓸데 없는 짓은 하지 않는다”고 부정했다.

바로리는 북한의 대미 관계와 관련해 “북한이 여하튼 양자 간 교섭을 바라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2000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초대하려 했다.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높아 (만일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핵문제와 금융 제재에서 미-북한 협상이 일시에 진전되기를 희망했다”고 전했다.

北, 12기 대의원 중앙선거위 구성

-- 1월 12일 연합뉴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오는 3월8일 실시될 제12기 대의원(우리의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에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부위원장에 김중린 노동당 중앙위 비서, 서기장에 최영립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서기장을 각각 임명하고 지난 6일 이를 공식 발표했다.

또 중앙선거위 위원에는 주상성 인민보안상, 리용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1비서, 김병팔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장, 강창욱 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장, 로성실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장, 김영호 내각 사무국장, 김완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장, 정태근 인민군 총정치국 선전담당 부국장, 김지선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강철원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부회장이 선정됐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지난 6일 전원회의를 열어 12기 대의원 선거를 3월8일 실시한다고 결정했으며 다음날 이를 공식 발표했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5년으로, 11기 대의원 임기는 작년 9월에 끝나는 것이었지만 북한은 선거가 미뤄왔다.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선거일 두달전 공고, 공고 후 10일 이내 중앙선거위원회 구성, 선거일 15일전 선거인 명부 작성과 공시, 선거일 3일 전에 후보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친다.

“남북경협 중단시 경제손실 7조”

- 1월 12일 헤럴드경제

경색된 남북관계가 새해 들어서도 전혀 진정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남북경협이 전면 차단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 손실액이 총 7조1000억원에 이를 것이라 전망이 12일 나왔다.

남북경협시민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비잔티움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경협이 전면 차단될 경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등에 대한 투자손실이 3조5000억원, 영업손실이 3조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협연대는 이 가운데 철도·도로 복원 사업 지원 8000억원, 입주기업 손실보조 약정액 3082억원, 남북협력기금 사용 1200억원 등 정부지원 손실액만 1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단체는 이 같은 수치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남북 육로통행 차단조치 이전)까지 북한에서 생산해 남측으로 반입한 금액 8억6230만 달러에 개성공단 평균 부가가치 2~7배를 생산품목별로 곱해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규철 경협연대 대표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개성공단 기업들의 주문량이 30~60% 가량 줄어든 위기상황에서 올해 남북관계가 경색을 넘어 대치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경협 전면차단시 발생할 손실규모를 밝혀 당국의 특단의 대처를 촉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북한, 단동에 영사 출장소 개설

-- 1월 12일 한국일보

북한이 중국의 최대 교역 창구인 단둥(丹東)에 영사 출장소를 개설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선양(瀋陽) 주재 북한 총영사관이 최근 라오닝(遼寧)성 단동에 출장소를 개설하고 직원

을 상주시켰다”며 “이는 증가하는 단동의 영사 업무 수요에 대응하려는 취지이지만 북중 무역 활성화와 중국을 통한 물자 조달을 강화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번 출장소 설치는 북중 양국이 수교 60주년을 맞은 올해를 ‘양국 우호의 해’로 지정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북한은 북중 교역 물자의 70% 이상이 통과하는 단동에 출장소 개설을 중국 당국에 꾸준히 요청해 왔었다.

앞서 대외 교역 업무를 관장하는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단동 대표부도 지난해 말 직원들을 대거 교체하는 등 재정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7월 북중 교역 규모는 14억2,300만달러이며 지난 한해 양측 교역량은 20억달러를 상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美 비둘기파 뜨고 매파 지고

- 1월 12일 연합뉴스

미국의 외교정책을 이끌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내정자가 ‘소프트 파워’ 시대를 예고함에 따라 네오콘(신보수주의자)으로 대변되는 강경 매파가 떠나고 대화와 협상을 중시하는 비둘기파가 그 자리를 대신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북한을 비롯해 쿠바,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과의 외교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 인터넷판이 11일 전망했다. 신문은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 외교를 강하게 비판했던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 주 외교팀을 발표, 미국 외교정책의 일대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팀은 부시 행정부의 정치적 일방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시리아, 쿠바, 베네수엘라는 물론 이란, 팔레스타인의 강경 무장 정파 하마스 등과 직접 대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이슬람 지역에 외교정책의 초점을 맞춘 것이 특이다.

또 남북한을 관할하는 동아태 담당 차관보에는 커트 캠벨 전 국방부 부차관보가, 유럽 차관보에는 필립 고든 전 국가안보회의(NSC) 유럽 국장이 각각 임명될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北무기수출 반등...1억弗 상당”

- 1월 12일 연합뉴스

지난 해 북한의 무기 수출량이 반등, 총 1억 달러 상당을 중동·아프리카·중남미 등의 일부 국가들에 판매했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은 “작년 북한의 무기 수출 규모가 1억달러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등으로 인해 수천만달러 수준으로 떨어

졌던 연간 무기 수출액이 작년에 일부 회복된 셈”이라고 말했다. 작년 북한의 무기 수출량이 증가한데는 북핵 프로세스의 진전에 따른 북한의 대외 정세 완화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2006년 10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는 북한이 전차, 장갑차량, 중화기,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이나 미사일 시스템 일체와 관련된 물자 등의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달 미국의회조사국(CRS) 연례보고서를 인용, 북한이 2000~2007년 10억달러 규모의 무기를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수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NKorea reshuffles cabinet to focus on economy
북한이 내각을 경제 위주로 개편하다

-- 1월 7일 AFP

출처:<http://www.google.com/hostednews/afp/article/ALeqM5iDwibdTDRRRYQcWDxtWncTR2E5w>

Communist North Korea has replaced at least nine cabinet ministers in a major reshuffle seen as a new bid to revive its stagnant economy, Seoul officials said Tuesday.

South Korea's unification ministry, which closely monitors the North's official media, said Pyongyang had replaced its finance, trade and commerce ministers.

New faces were also being brought in at ministries overseeing the metal industry, electricity sector, railways, forestry and fisheries. There was also to be a new minister-level economic cooperation commission chief.

Unification ministry spokesman Kim Ho-Nyoun told a briefing Seoul could identify five of the nine new cabinet members in the secretive state, adding more could be replaced.

.....

북한이 내각 각료 중 적어도 9명 이상을 교체하여 경제 회생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남한의 통일부 관계자가 화요일에 전했다.

남한의 통일부는 북한의 매체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북한 정권이 재무, 교역, 상무 장관을 교체했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인사는 금속, 전력, 철도, 산림, 어업을 관장하는 부처 및 경제 협력 위원회의 수장에도 임명되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9명의 새로운 각료급 임명자 중 5명은 확인되었으며, 그 이상의 교체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남한의 북한 전문가 동국대 김용현은 이러한 내각교체는 경제회생을 지향하는 것이며, 경제회생이 기대보다 느린 것에 대한 국방위원장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

인다고 말했다 ……

SKorean farmers urge resuming food aid to North 남한의 농민들이 대북 식량지원의 재개를 촉구했다

-- 1월 8일 VOA

출처:<http://www.iht.com/articles/ap/2009/01/08/asia/AS-Korea-Food-Aid.php>

South Korean farmers urged their government Thursday to resume regular food aid to North Korea as they prepared to send their own rice shipment to the impoverished neighbor.

Seoul was a major aid donor to the North when it sought detente on the divided peninsula under two previous liberal administrations. But the aid stopped after conservative, pro-U.S. President Lee Myung-bak took office last year with criticism of unconditional assistance to the North.

On Wednesday, South Korea's largest farmers' organization — the liberal-leaning Korean Peasants League — called for legislation that authorizes regular rice shipments to the North — a measure aimed at shielding humanitarian aid from political tensions.

Spokesman Kim Ho-nyeon of the Unification Ministry, which handles relations with the North, said the government is not considering legislation.

……

남한의 농민들이 지난 목요일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의 재개를 남한 정부 측에 촉구했다. 대북 화해를 지향하던 과거 2대에 걸친 자유주의자 한국정부는 최대의 대북지원자였다.

그러나 친미적이고 보수적인 현 이명박정권은 지난 해 정권을 잡고 무조건적인 대북지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중단했다. 지난 수요일 남한 최대의 농민조직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정치적인 긴장으로부터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인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법률제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대북 관계를 주관하는 통일부의 김호년 대변인은 정부는 이러한 법제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金總書記、後繼不在の「3つの理由」

김 총서기, 후계 부재의 세 가지 이유

-- 1월 9일 산경신문

北朝鮮の金正日總書記の統治実態は依然としてナゾに包まれている。不透明な北朝鮮の権力掌握情勢のなかで関心が高まっているのはポスト金正日体制。だが、父、故金日成主席とは異なり金總書記は後繼者指名してこなかった。それはなぜなのか。北朝鮮、後繼不在の「3つの理由」を探った。

■公開されない息子たち

北朝鮮では金總書記の息子の名前も存在も公表されたことは一度もない。韓国の元統一相で北朝鮮研究者の康仁徳氏は「3人の息子がいずれも正式な結婚で生まれた子ではないからだ」と述べる。「革命の血統」を重んじる北朝鮮で彼らに後繼者の資格はない」

■帝王学の未修

北朝鮮の権力掌握には朝鮮労働党、人民軍の要職歴任が欠かせない。「まず朝鮮労働党内の人事権や処罰権で権力を集中的に持つ組織指導部だ。次に人心掌握の宣伝扇動部。さらに軍部だ。そして重要なのが『革命問題』、つまり対南(韓国)工作部署となる。しかし3人の息子はいずれも海外生活が長く、金總書記は帝王学を息子には学ばせていない」

■分派と権力闘争

金總書記への世襲は、幼いころから金總書記を知る崔庸健・元保衛相や呉振宇・元人民武力相など元老たちが自身の息子らの生き残りもかねて推進した。しかし、独裁色が強化された金正日体制下の側近らは「失態で独裁者からの粛清を恐れる“忠誠集団”となった」(北朝鮮筋)。後繼問題は忠誠競争を煽り、権力闘争の誘因となる可能性が指摘されている。

북한의 김정일 총서기의 통치 실패는 여전히 수수께끼에 싸여 있다. 불투명한 북한의 권력 장악 정세 속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포스트 김정일 체제. 아버지, 고 김일성 주석과는 달리 김 총서기는 후계자를 지명해 오지 않았다.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 북한의 후계 부재에 대한 「3가지 이유」를 알아보자.

■ 공개되지 않는 아들들

북한에서는 한 번도 김 총서기 아들의 이름은 물론 존재도 공표된 적이 없다. 북한전문가인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3명의 아들이 모두 정식 결혼으로 태어난 아이는 아니기 때문」이라며, 「혁명의 혈통」을 존중하는 북한에서 그들에게 후계자의 자격은 없다」고 말한다.

■ 제왕학 이수하지 않아

북한의 권력 장악에는 조선노동당, 인민군의 요직 역할을 빼뜨릴 수 없다. 「우선 조선노동당 안에서 인사권과 처벌권을 바탕으로 권력이 집중돼 있는 부서는 조직지도부이다. 다음은 인심 장악의 선전선동부. 특히 중요한 곳은 군부다. 그리고 중요한 곳이 「혁명 문제」, 즉 대남공작 부서이다. 그러나 3명의 아들은 모두 해외 생활이 길고, 김 총서기는 제왕학을 아들에게는 가르치지 않았다」

■ 분파와 권력 투쟁

김 총서기의 세습은 어릴 때부터 김 총서기를 잘 아는 최용건 전 보위상과 오진우 전 인민무력상 등 원로들이 자기 자식의 생존과 함께 추진했다. 그러나 독재가 강화된 김정일 체제 하의 측근은 「실수로 독재자의 숙청을 무서워하는 ‘충성 집단’이 되었다」(북한 관계통). 후계 문제는 충성 경쟁을 부추겨 권력 투쟁의 유인이 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추천 논문

북한 수출산업의 현황과 발전 과제

동용승(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

통계상으로 보면 사회주의 붕괴 이후 급감했던 북한의 대외무역은 90년대 초반 수준으로 회복됐다. 여전히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고수하는데도 북한의 대외무역이 이 정도로 회복한 것은 구소련의 역할을 90년대는 중국과 일본이, 2000년도에는 일본 대신 한국이 담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북한은 상대적으로 수출산업 육성의 절실함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경제의 침체와 한국의 정권교체로 중국과 한국이 앞으로 계속 이런 역할을 담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북한 스스로 수출산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즉, 그동안 북한의 대외무역은 국가독점의 중앙집권 무역체계에 의해 이루어졌고, 가격에 의한 무역보다는 쌍무적 바터거래에 기초한다는 원칙에 기반해 왔다. 따라서 시장경제 방식의 무역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적자를 면치 못했으며, 수지 적자로 인한 부족 외화는 해외 인력송출, 개성공단과 금강산 등의 임대수익, 제3국을 통한 중계무역 등을 통해 벌충해 왔다.

이러한 탓에 북한의 수출품 구조 역시 수출산업 육성을 통해 생산된 품목이 아니라 추가적인 생산 재원이 필요 없는 국내 잉여를 활용한 생산품이나 채취산품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3대 주요 수출품인 섬유류는 국내 잉여인력을 활용한 임가공 수준이며, 광물성 제품이나 송이, 약재 등도 단순 채취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출'의 계획경제 방식으로는 수출산업 발전에 한계가 있고, 이 한계는 2012년 강성대국으로 가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북한도 수출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욕은 크지만 극복하기 힘든 정치적 딜레마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 역시 만만치 않다.

북한이 수출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북한당국 스스로 변화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로 변화에 대한 현실적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경제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중국과 일본 혹은 일본을 대신한 한국의 역할로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버텼으나 앞으로는 한국과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 수 있다.

둘째 북한이 가지고 있는 훌륭하고 풍부한 인력이란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임가공, IT분야 개척, 해외 건설 분야 등에 대한 인력 송출 등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인력의 해외 활용에 필요한 정치적 한계를 풀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로는 외자 특히 한국자본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외국자본은 북한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의 투자유치 정책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자본은 여타 국제자본에 비해 북한시장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며, 북한시장의 수준에 맞추어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군이 있다. 그러므로 북한도 한국자본에 특히 폐쇄적인 태도를 바꾸어 오히려 한국자본을 앞세워 외국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화해야 한다.

이렇듯 북한 수출산업의 발전과제는 결국 북한의 개혁개방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북한 스스로 변화를 택하여 민물(계획경제)을 바닷물(시장경제)로 바꾸는 의지를 보여야 할 시점에 다다른 것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이 발간하는 『수은북한경제』 2008년 겨울호에 실릴 이 글의 원문은 [http://www.koreaexim.go.kr/kr/file/publication/01_논문\(2008겨울호\)_북한수출산업의~1.pdf](http://www.koreaexim.go.kr/kr/file/publication/01_논문(2008겨울호)_북한수출산업의~1.pdf)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09년 己丑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겨레사랑 『2009년 남북한 통일달력』 제작, 독자님께 드립니다



(주)겨레사랑에서 『2009년 남북한 통일달력(탁상용)』을 만들었습니다.

『주간 북한경제 동향』 독자님들 중 달력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master@dprkinvest.org)로

주소와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www.krlove.net -사진자료실에서 파일로 다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